

먹구름 끼는 원전센터 항로

주 승 환

고려공업검사(주) 연구소장 · 공학박사

속보에 놀란 가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속보>*기사에 놀란 가슴, 전혀 믿기지 않는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는 「원전센터」란 그럴듯한 가명으로 선량한 특정 주민들과 게임을 즐겨온 것은 아닌지 아주 의아스럽다.

놀란 가슴 속에다 의심을 깔고 보면, 지금까지 참여 정부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회적인 갈등들, 예컨대 사태 산 사태를 포함한, 사태 홍수들은 어떤 특정 성향 집단이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회 역할극'들이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이 지난 6월 24일 강현욱 전북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원전센터와 관련하여 하소연 하듯 서로 주고받은 얘기들이 전북도의 보도 자료에 담겼다. 참여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참여연대의 지위는 정부 기구보다 한 단계 위에서 겁 없이 정부 정책을 마구 무무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옥상옥의 먹구름 소식

지금도 정부 조직의 가상옥들은 무허가 건물처럼 마구잡이로 지어지고 있다. 원전센터 재공고 이후, 지난 5월 27일, 산자부는 에너지 정책을 난도질할 11명의 「에너지정책민간합동포럼」을 조직했고, 그 조직의 민간 부문 초대 위원장에 어느 특정인을 임명했다.

그는 모든 국가 정책 사업 현장의 전면에서 투사처럼

싸워왔던 선봉장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원전 자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기를 원했고, 앞으로 원전센터 건설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원전도 자연 폐쇄된다는 논리를 폈다는 그런 점들이다.

여기에 덧붙여 산자부는 「공동기구」란 또 다른 옥상옥을 늦어도 오는 8월 15일까지 만들고, 그 기구의 결정에 따라 원전센터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갈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시켜 버릴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한다. 공동기구의 역할은 과연 원전센터 건립이 그렇게 급한 시설인지를 심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한다. 한참 거꾸로 갈 발상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달마다 '역할극'의 레퍼토리는 바뀌는 셈이다. 필자의 눈에는 전혀 그럴만한 까닭이 없을 터인데(?), 원전센터 건립 사업에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작용하여 제동이 걸린다.

가상, 그런 기구들이 꼭 필요했다면, 왜 재공고의 항해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런 기구들을 만들지 않고, 이제 와서 옥상옥을 급조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잘 알려진대로, 정부가 기획했던 원전센터 건립 사업은 3단계의 과정들로 추진되고 있다. 그 공고에 따라 이미 첫 단계의 주민 청원이 마감됐고, 제2단계 항해는 순풍에 돛달았다. 급작스러운 돌풍과 먹구름의 시샘은 사업의 항해를 가로막는다.

원전센터를 청원했던 일부의 순진한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믿지 못할 정부 에너지 정책에 휘청거리는 모습들이 감지된다.
 청원 지역들의 반핵 단체 활동들은 더 세련된 투사적 모습으로
 양 손(정부와 현장)에 다시 칼날을 세우고 등장했다.
 중앙의 어느 중심 단체의 지시를 받기라도 하듯,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문을 열었다.

모르긴하겠지만, 원전센터의 미분 방정식을 풀 조건
 들은 옥상옥에서 나올 것이다. 반핵 단체와 친환경 단체
 들은 당초 예측했던 작전의 잘못을 사후에 감지했을 터
 이고, 작전의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았을까? 주민 청원
 이 없을 것이란 잘못된 판단에 허가 찢렸음이 분명하다.

무소불위

저들은 장관이 마련한 원탁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
 다고 한다. 그림자의 모습으로 장관을 뒤따르면서 장관
 을 압박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한마디
 로 아주 혼란스럽다.

다시 들먹이기조차도 역겹지만, 정부의 주도로 이어
 졌던, 일련의 원전센터 후보지 선정과 관련돼 촉발됐던
 안면도, 굴업도, 부안, 그리고 이어질 다음 xx 사태들과
 같은 '역할극' 들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을
 뿐더러, 어느 누구나 용납해서도 안 될 것임은 자명하
 다.

공교롭게도, 이들 사태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투사적
 성향의 참여연대가 있었다. 참여 정부 이전에는 NGO
 단체로서 정부 밖이 저들의 활동 무대였다. 그리고 환경
 보호란 위장 간판을 내걸고 유-무형 전리품을 노려왔
 다.

하지만, 참여 정부 이후는 저들의 무대가 정부 안에서
 정부 시스템을 조정하는 가상 단계로 탈바꿈했다. 어느
 때고 원한다면, 저들은 정부의 정책 사업에 끼어들 수
 있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활동
 한다. '홍위병' 이 따로 없다.

"어차피 부안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원전센터를 청원했던 일부의 순진한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믿지 못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휘청거리는
 모습들이 감지된다. 청원 지역들의 반핵 단체 활동들은
 더 세련된 투사적 모습으로 양 손(정부와 현장)에 다시
 칼날을 세우고 등장했다. 중앙의 어느 중심 단체의 지시
 를 받기라도 하듯,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문을 열
 었다. 저들은 전처럼, 섬뜩한 얘기들을 서슴지 않는다.

노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결의를 저주했고, 더구나
 원전센터를 고향에 유치하려고 미쳐버린 필자만 외롭
 고, 가소로울 뿐이다. 참여 정부 이후, 적잖은 사업가들
 그리고 정부 고위직의 자살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
 었을 것이다.

참여 정부이기 때문인지, 정부 에너지 정책의 총사령
 관인 장관도 그들 눈치를 살펴야 한다면, '에너지시민
 연대' 김태호 사무처장이 살기충천하게 내뱉은 "이 말
 을 꼭 하고 싶다. 지금 유치 신청을 전국의 몇 군데에서
 받든 관계없이 현재의 추진 방식은 어차피 부안의 전철
 을 밟을 것이다."(『논쟁과 대안, 중앙일보 2004.6.8.,
 25쪽)에 전적으로 따르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결하든
 지, 달리 그들과 맞서 싸울 길은 없어 보인다.

영원한 우주 공식

1368년 주원장은 농촌 출신의 거지였다. 그는 혁명을
 일으켜 원나라를 깨부수고 300년간 중국을 다스릴 명
 나라를 세웠다. 혁명 과정에서 목숨을 걸고 그를 따랐던
 많은 농민 투사들은 그들의 참여로 성공을 거두자 전리

우리는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런 인력 자원을 부럽게 쳐다본다.

도대체 이 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가 방향타를 움켜잡고 어느 쪽으로 몰려고 하는가?

전문가 그룹인가, 아니면 비전문가로 이뤄진 막가는 단체들에 휘둘러 끌려가고 있는가?

원자력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절규한다. 방사성 쓰레기들이 폭발한다고 주장할 만큼

원자력을 모르는 저들에게 언제까지 원자력을 맡겨놓아야 할 것인가?

품을 챙기려 했다.

궁중에다 그들을 들여놓고 일을 맡길 수는 없었다. 아는 것이란 농사짓는 일과 선행하는 일밖에 모르는 그들이었다. 그랬다면, 아마도 그들은 주원장을 존경할리도 만무했을 것이며, 평상의 버릇으로 군주의 절대적 권위를 업신여길 틈새가 났을 것이다.

그렇다고 몇 푼의 돈을 쥐어주고 농촌으로 돌려보낸다면, 그들은 주원장을 다시 몰아낼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명나라 건국의 대대적인 경축 잔치를 준비했고, 농민 동료들을 빠짐없이 한 자리에 초청했다. 한 건물 안에서는 기막힌 특별 잔치가 벌어졌다. 모두가 술에 취한 틈을 타서 입구를 봉쇄하고 연회장에 불을 질러 혁명동지들을 단숨에 완벽하게 소탕해 버렸다.

이런 짓은 한 정치가의 흑심이라 보기에는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이다. 하지만, 정치가 무엇인가를 역사적 사실은 우리들에게 일깨운다. 영원한 우주 공식인 자연의 섭리는 '모든 사물이 그만이 갖는 고유한 쓸모를 타고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원자력 가족들이여! 침묵하지 말자!

우리는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런 인력 자원을 부럽게 쳐다본다.

도대체 이 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가 방향타를 움켜잡고 어느 쪽으로 몰려고 하는가? 전문가 그룹인가, 아니면 비전문가로 이뤄진 막가는 단체들에 휘둘러 끌려가고 있는가?

그나마도 우리 전력의 41%를 생산하는 효자 산업인 원전을 송두리째 뒤엎으려는데, 왜 전문가 집단들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어야만 하는가?

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이 꼭 필요한 정책 사업의 기술적 검토는 반드시 전문가의 머리와 손발로 올바르게 판단된 자료에 바탕을 뒤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공무원의 자의적 상황 판단에 따르는 정치적 결단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에너지의 근본이 뒤흔들리고 있는데도 야당들은 이런 사태 양산에 뒷짐 지고 방관만 할 것인가? 지금 당장 한강에 투신해도 성이 안찰 일들이 정부의 정책 사업들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통탄한다.

원자력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절규한다. 방사성 쓰레기들이 폭발한다고 주장할 만큼 원자력을 모르는 저들에게 언제까지 원자력을 맡겨놓아야 할 것인가?

원자력 가족들이여!

저들처럼 현장에 나와 휘청거리는 원자력산업을 살려내자!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속보〉 “원전센터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모 절차 진행 여부는 앞으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동기구의 논의 결과에 따르게 됐다.”(〈새전북신문〉2004.6.24)

✉(choo6261@hanmail.net)